

11월 농업계 정세 전망과 과제

1. 우리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DDA 농업협상...11월 첫째 주까지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 관련 합의가 이뤄질 듯

○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WTO 일반이사회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업협상에 대한 합의사항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끝났다. 프랑스가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감축 관련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의 명확한 합의도 없이 EU 집행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실리를 얻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가 지금까지 농업협상 분야에 있어 양보를 해 왔던 만큼, 비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 여타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집행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협상은 당분간 교착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선불리 전망해서는 안된다. 월간 한농연 10월호 지면에 소개된 바와 같이, 미국과 EU, G20(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

룹)들은 관세상한 도입과 관세 감축율 증가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G20 국가들이 민감 품목의 수를 전체 농산물 중 1%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140개가 넘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 우리 정부는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을 중심으로 DDA 농업협상에 적극 대처한다는 전략이지만, 농산물 수입국 그룹의 주장과 요구사항이 수출국들에 비해 훨씬 밀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11월달의 농업협상과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전망은 절대로 낙관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에 한농연은 DDA 농업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12월 홍콩 각료회의에 약 150명의 대규모 투쟁단을 파견하여 국내외 농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2. 쌀 협상 비준안 강행 예상 속 쌀값 폭락세 진정 기미 없어...정부와 농협의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필요, 11월 중순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 개최 예정

○ 정부 여당이 오는 11월 16일 쌀 협상 국회비준안 처리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지역의 쌀값 폭락세는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농림부는 그간의 폭락세가 진정되어 반등중이라는 자료를 내놓았으나, 정부와 농협의 공공비축(산물벼) 및 자체 구매가격이 매우 낮은 선에서 결정되고 있고 민간 RPC와 도정업자들은 내년 수입 식용쌀 시판 등을 앞두고 매입을 꺼리고 있어 가시적인 쌀값 반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쌀값 조사 결과마저 믿을 수 없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관내에서도 쌀값이 가장 비싼 철원군 지역 시가는 반영되는 반면, 제일 가격이 낮

은 춘천시의 쌀값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 17만 83원과 전국 평균 쌀값과의 격차에 대해 85%만 보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산지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쌀값이 낮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농민들은 쌀값 폭락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반면, 높은 쌀값을 유지하던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농민 또한 쌀값 하락 피해분에 대해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국의 쌀값을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향후 3년 뒤 목표가격의 대폭 하락까지 초래하여 쌀 생산기반 붕괴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이에 한농연 등의 농민단체들은 공공비축 산물벼 및 농협 자체수매의 40kg 벼 한 포대의 잠정 매입가격을 최소 46,0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마저도 2001년 같은 기간 한농연의 요구 수준이었던 57,760원보다 20% 하락한 수준이며 최소한의 농민생존권 확보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특히 올 수확기와 내년 봄·여름 단경기까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이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물량 80만석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각 도별로 계산된 쌀값을 기준으로 목표가격과

의 차액 100% 전액을 보전하되,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의 산지 쌀값 조사 결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오는 11월 중순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집회를 개최하여, 올 수확기 극심한 쌀 대란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고, 농업회생의 근본대책 없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발표할 것이다.

3. 11월 APEC 정상회의서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확실시...미국측 분석 결과 국내 농업 GDP의 3분의 1 정도 피해 우려, 전 농업계의 적극적 대응 요구됨

○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영화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제기해 왔는데, 우리 정부가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미 FTA는 350만 농민을 옥쇄는 구체적인 현실이 될 전망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의 검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할 사항이므로 당장 수입재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만은 이미 수입을 허용한 상태이며 일본마저도 올 겨울에는 수입을 공식 허용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입 재개가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소비자 식품 안전성 및 악성 가축 질환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의 차원이 아닌 통상마찰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의 저자세에 있다. EU(유럽연합)이 1989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 물질이 검출된 이후 지

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특히 미국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업 GDP가 최대 8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는 30조원이 조금 넘는 우리나라 농업 GDP의 거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이어서 국내 농업에 결정적인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3조원에 육박하는 농업 GDP 감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미 한농연을 포함한 국내 농민단체들과 농협조사연구소 등의 학계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서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11월 중순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 선언이 이뤄질 경우, 향후 3~5년간 국내 농업을 둘러싼 최대 화두로써 한-미 FTA가 적극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농관운동의 흐름이 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